
서 평

사상이나 윤리냐: 일제말 문학을 인식하는 에피스테메

한 수 영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방민호 교수의 노작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가 출간됨으로써, 1990년대말부터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여 십여 년 전개되어 온 일제말 한국문학 연구는 한 차례 종합과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전체 4부 16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방대한 저작은, ‘친일문학’ 혹은 ‘대일협력’이라는 프리즘을 가운데 두고, 1937~45년간의 한국문학의 총량을 투과시키고 있다. 대상 문인도 임화를 비롯해 이태준, 김환태, 이효석, 김기림, 이광수를 거쳐, 이상, 김남천, 박태원, 채만식, 김사량, 오장환, 조지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친일’과 ‘대일협력’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작가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수준이다. 굳이 흠을 잡자면, 동일 주제를 논할 때 한번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재만 조선인 문학’이 빠져 있다든지, 또는 문인 중에서도 최재서나 백철, 그리고 김동리 정도는 한 꼭지를 할애했어야 할 중량감 있는 문인이 아닐까 하는 아쉬

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업이 애초에 사전적 차원의 조망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이 정도의 부피와 중량을 탑재한 연구는 최근의 동일 분야 성과들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서평자 역시 2005년 말에 『친일문학의 재인식-1937~45년간의 한국소설과 식민주의』(소명출판)라는 책을 내어, 이 논의의 말석(末席)에 참여한 바 있거니와, 아마도 이런 연유로 방민호 교수의 노작에 대해 한 마디 첨언하라는 주문이 떨어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서평자의 책은 방민호 교수의 저작에 비하면 그 규모나 밀도에서 비길 바가 못 된다는 것이 책을 통독하면서 첫 번째 찾아든 느낌이다. 또 하나, 서평자를 압도해 온 것은, 이 책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콘텍스트 구성의 풍요로움과 상호텍스트성에 입각한 ‘겹쳐 읽기’의 입체감이었다. 텍스트 해석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방민호 교수의 다른 글들에서도 늘 만나게 되는 그만이 지닌 연구자로서의 개성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십분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 이번의 저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자는 단일 텍스트를 다루는 ‘작품론’ 성격의 논문을 쓰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작가론’의 형태가 되도록 치밀하게 재구성한다. 그래서, 해석의 대상이 되는 중심 텍스트의 앞뒤로, 해당 작가의 여러 텍스트들을 때로는 선형적(線型的)으로 배치하여 시간의 전이에 따른 변화를 읽어내려고 애쓰고, 때로는 동심원처럼 하나의 텍스트를 둘러싼 같은 시기의 다른 작가의 텍스트들을 겹쳐 놓음으로써, 단일 텍스트의 의미에 함몰되지 않는 폭넓은 해석의 ‘겹눈’을 확보하고자 애쓴다. 연구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쓰고 싶어 하지만, 원한다고 모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민호 교수 특유의 박람강기와 유연함 때문에 가능한 글쓰기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당 시기 해당 주제에 관한 입장의 차이를 떠나, 이 책은 일제말 한국문학을 하나의 ‘스펙타클’로 만들어내고 있다.

저자는 친절하게도 책의 제일 앞 머리에, 일제말 한국문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시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론’을 배치해 두었다. 그래서 일제말 한국문학, 특히 ‘대일협력’ (저자가 ‘친일문학’이나 ‘협력’ 혹은 ‘공모’와 같은 기존 용어를 배제하고 일관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므로, 서평자도 그 입장을 존중하여 서평에서 이 용어를 쓰기로 한다. 그러나 나중에 잠시 검토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자가 고집하는 이 ‘대일협력’이라는 용어 자체에 이 시기 문학을 이해하는 저자의 입장과 시각이 지닌 한계가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과 관련된 저자의 시각과 방법론, 그리고 해석의 좌표들은, ‘권두논문’인 「일제 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를 읽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방법론과 시각을 ‘총론’을 읽는 것으로 미루어버리면, 서평자로서 달리 할 일이 사라지겠기에, 우선 이 ‘총론’을 중심으로, 저자인 방민호 교수가 일제말 한국문학을 이해하는 시각과, 또 그것이 기존 연구의 어떤 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거나 반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와 효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2.

저자는 ‘대일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일제말 문학을 연구하는 의의를, “거기에서 한국 현대문학사를 위한 가치 있는 사유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4쪽)이라고, 서문에서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자가 말한 ‘가치 있는 사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폭력을 수반한 제도적·법적 강제로서의 ‘천황제 파시즘’에 ‘저항’하는 ‘사유’이며, 그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좁히자면 그러한 ‘사유’가 기록되고 내장된, 물질적 외화(外化)로서의 ‘문학(작품)’이다. 그러므로, 다소의 도식성을 용인한다면, 저자가 생각하는 일제말 한국문학의 ‘가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위계가 그려질 수 있다. 첫째, 텍스트에 명백한 ‘저항’이 그려지는 것, 둘째, 그러한

‘저항’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침묵’이나 ‘절필’로, 바꾸어 말하면 더 이상 쓰지 않음으로써 ‘저항’하는 행위, 셋째, 어떤 이유에서든 ‘창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창작’ 안에 최소한 ‘저항’의 계기를 내장하고 있는 텍스트, 혹은 단수의 텍스트가 명백히 ‘협력’을 드러내고 있다면, 해당 작가의 ‘복수의 텍스트들’을 통해 고뇌와 망설임, 또는 주저(躊躇)가 발견될 수 있는 것. 책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자가 자주 표명하는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음미’는 바로 세 번째 계열의 텍스트들 안에서, ‘협력’에 관한 고뇌와 망설임, 주저를 읽어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출’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뇌와 망설임, 주저를, 저자는 ‘연기’와 ‘위장’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

텍스트에 은폐되어 있는 ‘연기’와 ‘위장’을 파악하기 위해, 즉 ‘심층적 음미’를 위해 저자는 몇 가지 선결조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천황제 파시즘이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지배구조’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다른 식민지 문학과 구별해주는 한국문학의 결정적 요소로서, ‘한글’이라는 문자로 구축된 문학체계가 식민지 시기에도 독자적으로 굳건히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일제말 한국문학에 관한 기존 연구에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오도된 자명성’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것이 저자의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다.

우선, 천황제 파시즘이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지배구조’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는 ‘동의에 의한 지배’의 가능성을 저자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연구자들의 이런 경향이 호미 바바 등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가들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조건과 형태의 ‘식민-피식민’ 상황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론을 기계적으로 우리 문학에 적용함으로써 생긴 ‘오류’라고 비판한다. 아울러, 문인들의 ‘대일협력’에 ‘자발성에 기

초한 내적 논리'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외견상 그렇게 보일 뿐, 일제말 문학에서 결코 '자발성'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단호한 태도다. 저자는, “친일문학을 ‘내적 논리’, 즉 자발적인 논리 및 신념과 단단히 결부시키게 되면 천황제 파시즘이 근본적으로 폭력적인 체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32쪽)고 못 박는다.

임종국 선생이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이를 이어받아 김윤식, 김재용 교수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일제말 소설에서의 ‘언어민족주의의 극복’ 문제, 다시 말해 일본어로 씌어졌다고 해서 모두 ‘친일문학’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협력/저항’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자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일제 말기의 ‘일본어 글쓰기’는 오랫동안 서구의 지배를 받아온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제국 언어의 전유에 내포된 의미와는 다르다”고 전제한 뒤, “서구 식민지들에서 제국의 언어를 전유하는 행위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일제 말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일본어 글쓰기’는 이미 획득되었거나 구성 중에 있는 민족적 정체성의 약화 내지 해체 효과를 수반한다”고 보고, 그 때문에 ‘일본어 글쓰기’는 “조선적 에스니시티(ethnicity)를 일본적 로칼리티(locality)로 재규정하는 효과를 낳으며, 따라서 직접적인 ‘친일’ 메시지를 함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력’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36쪽)고 규정한다. 실제로, 그는 같은 작가의 일문(日文) 소설과 한글소설을 직접 비교분석하면서, 일문소설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자유스런 표현으로 이루어진 점을 밝혀내고자 애쓰며, 여러 작가들이 일문 소설에서 보여준 협력의 농후성을 한글 소설을 통해 희석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대체로,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온 일제말 문학연구가 새롭게 그 지평을 확장한 영역이라고 인정되는 것들, 예컨대 ‘지배/동의’구조를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 이론이나 ‘내적 논리와 자발성’의 문제, 그리고 ‘언

어민족주의의 극복'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저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그리고 이 시기의 한국문학을 '다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그의 '다시 읽기'의 전제는 이 시기 문학이 근본적으로 '가면의 문학'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폭압적인 파시즘 체제 아래에서 '협력'은 '연기'이며, 그 '위장된 순응'의 이면에 은폐된 '저항의 계기'들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문학 연구가 집중해야 할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일제말의 작가들이 이러한 '위장된 순응'과 '연기'를 위해 고안해 낸 새로운 '전략적 장르'가 '사소설'적 글쓰기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저자는 채만식, 이태준, 박태원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의 소설을, 저자가 고안한 '사소설적 규약'에 맞추어 해독(解讀)함으로써, 거기에 압호처럼 내밀하게 숨겨진 '주저'와 '(미약한) 저항'을 읽어 내고, 그 과정을 통해, '협력'쪽으로 분류된 이들 작가들을 다시 구제해 낸다. 일문소설이나 역사소설, 혹은 작가가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소설 양식의 경우에는 '협력'의 징후가 노출되지만, '사소설'의 형식을 통해서는, '대일 협력'을 거부하고 싶은 작가 내면을 드러내거나 최소한 양심과 자기윤리의 최후방어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에게 일제말의 '사소설 형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3.

무려 600쪽에 달하는 규모 큰 책의 내용을, 아무리 방법론과 시각을 중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압축·요약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를 읽는 즐거움은, 방법론과 시각의 독창성에도 있지만, 각론에 해당하는 개별 작가나 텍스트를 다루는 대목에서 더 집중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총론에서 제기된 이러한 방법론과 독해의 코드는, 놀랄 만큼 정확

하고 일관되게 개별 작가나 텍스트의 해석에 적용된다. 논리와 적용의 일치를 목도하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묘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평자로서의 소임 중에서, 이 책의 장처(長處)와 개성을 소개하는 것은, 미흡하나마 이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것은 글의 분량이 이 책의 미덕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점에서, 서평자가 납득하기 어려웠거나,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순서다.

가장 먼저, 저자와 토론을 나누고 싶은 대목은, 일제말 문학을 인식하는 지평(地坪) 혹은 에피스테메에 관한 논의이다. 서평자는 근본적으로 일제말의 한국문학이나 문학사상을 ‘협력/저항’의 축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시기 문학의 해석과 인식의 지평을 너무 제한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문학사의 모든 시기가 그러하듯이, 일제말의 문학 또한 좁게는 ‘근대 문학사상사’의 한 부분이며, 넓게는 ‘근대지성사’나 ‘지식인사’의 한 부분이다. 앞에서, 이 시기의 작가의 행위와 사상을 시종일관 ‘대일협력이나 아니냐’로 판단하는 저자의 논점에 어쩔 수 없이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거니와, 그것은 이 시기 문학에 내장된 ‘사유’ 또는 ‘사상’의 내용과 형식이, 단지 식민 지배 당국의 정책과 지배이데올로기에 협력하느냐 저항하느냐의 ‘문제를’로만 수렴되지 않는 더 많은 ‘잉여’와 ‘초과’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제말의 문학을 ‘대일협력’이라는 좁은 지평으로 접근하는 한, 그 반대편에 ‘천황제 파시즘’이라는 대타항(對他項)만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실 일제말 한국문학사상사를 관류했던 문제의식은, 천황제 파시즘에 대한 태도 여하를 포함하면서, 그것보다도 더 확장된 사상사적 계기들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친일문학의 재인식』 쓰던 때를 돌이켜 보면, 서평자의 내부에서 끊

임없이 공명하던 것은 “사상으로서의 친일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다.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의 저자인 방민호 교수는, ‘협력’의 축에 포함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섬세하게 읽어내면서, ‘협력’처럼 보였던 그들의 텍스트가 사실은 ‘위장된 순응’이었으며, 기실은 ‘저항’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소설의 전략’을 재구(再構)하며, 마침내 그들을 ‘구제’하려고 애쓴다. 저자는 이러한 ‘구제’가 이 시기 문학에 관한 온당한 해석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지만, 나는 거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인간’으로부터 그 ‘주체성’을 박탈하고, 한 시대의 고뇌의 한 가운데 놓인 채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궁리하고 있던 작가(이자 지식인)를 ‘식물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자는 책의 곳곳에서 ‘한국이 경험한 식민지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이 ‘특수성’을 궁극적으로는 ‘위장된 순응’과 ‘가면의 글쓰기’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작가들의 내면을 읽어내는 최종심급(거꾸로 말하면 식민 지배의 폭압성과 강제성을 강조하는 최종심급) 정도로 사용하는 데 국한하고 있지만, 이 지점에서 나는 거꾸로, 한국이 경험한 ‘식민주의’의 일반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특수성’의 문제도 저자의 주장과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형식으로 문제삼기를 제안하고 싶다. 식민주의는 좁게 잡더라도, 18세기 이후 지구인의 2/3가 경험하고, 유럽 몇 나라를 제외한 지구의 전 대륙이 경험한 일종의 ‘보편적 역사현상’이다. 물론 식민지 경험이 없었던 편이 있던 것보다 훨씬 나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지배하는 쪽이었던들 반드시 지배받는 쪽보다도 낫거나 행복하다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의 국민들을 놓고 보더라도 분명해지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러이 늘어놓는 까닭은, 강제된 폭력으로서의 ‘식민지배’만이 강조되는 한, ‘식민 지배/피지배’와 연관된 더 넓고 깊은 역사의 지평이 가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를 읽는 동안, 나는 『친일문학의 재인식』을 쓸 때 만났던 사유와 사상의 주인인 ‘주체’로서의 우리 작가들 대신에, 눈치보고 주눅 들고 감추기 급급하고 웅색하고 초라한 우리 작가들을 마주쳐야만 했다. 이런 방식의 (문학)사상사의 재구성은, 작가들을 ‘수난자’나 ‘피해자’로 만들어 폭압적인 시대의 ‘희생양’으로서 면죄부를 받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한국 근대문학사상사나 지성사의 ‘주체’로 내세우기에는 너무 무력한 방식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저자가 강조하는 ‘식민지의 한국적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각도를 달리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경험한 식민지배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로 ‘동일인종’에 의한 지배였다는 점(따라서 인종적 동일성이 동이의 논리적 메카니즘을 구성했던 거의 유일한 식민지배 형식이었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 중국에는 ‘동양 대 서양’이라는 인종적 차이에 기반한 문명사적 구획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근대초극론’이나 ‘대동아’라는, 제국을 발신지로 하고, 식민지주체들을 ‘수신자’로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만드는 근인(根因)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로는, 한자라는 보편문자(중세 공통문어)의 유산이 완강히 자리 잡고 있어서, 언어습합이나 이중언어와 같은, 식민지배 언어와 피지배 언어 사이의 ‘언어접촉’ 국면이, 다른 식민지와 현격히 달랐다. 이는 ‘일본어 글쓰기’라는 제한된 문학언어의 문제보다도 더 심층적인, 근대 (문학)언어 형성의 문제와 직접 결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식민주의와 언어’라는 문제틀에서 보자면, ‘일본어 글쓰기’는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평자의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근대 (문학)언어의 형성과정에 개입되는 식민주의의 문제를 염두에 둘 때, ‘일본어 글쓰기’는 차라리 너무 명약관화하여 고민할 여지가 없는 문제인 반면에, 저자가 ‘한글로 구축된 문학세계가 엄연히 있었다’고 말

할 때의 그 ‘한글문학’에 투입되고 절합되는 제국 언어와의 접촉이나 변용의 문제는, ‘일본어 글쓰기’만큼 가시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근대어의 바탕을 관류(貫流)하고 있는 문제여서 규명하는 데 훨씬 더 공력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치누아 아체베나 은구기와시옹 오가 영어로 창작할 것이냐 스와힐리어로 쓸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그들이 경험한 ‘식민주의와 언어’의 문제의 중핵이라면, 우리에게 그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보다는, 해방 전의 김동인이나 해방 후의 김수영이, 일본어로 먼저 써놓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통해 지워진 듯 보이지만 기실은, ‘한글’로 표기된 문학의 저변을 가로지르는 ‘일본어’의 그림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본어 글쓰기’가 ‘협력이나 아니냐’의 질문에 묶여 있는 한, 정말로 중요한 ‘식민주의와 언어’의 문제의 본질은 놓치게 될는지도 모른다.

일제말 문학에 대한 인식 지평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저자가 ‘제국’이나 ‘식민주의(자)’라는 주체를 너무 ‘고정불변의 완결된 실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국을 발신지로 하는 모든 정책과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악(惡)이거나 ‘허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사태의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진 인식 태도이다. 예컨대, 그는 “1931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15년 전쟁 기간 동안 조선인들, 특히 지식인들은 만주전쟁을 만주사변으로, 중일전쟁을 지나사변으로,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부르는 위선과 허위의 메카니즘에 노출되어 있었다”(445쪽)고 전제하고, “이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459쪽)고 거듭 강조한다. 어떤 ‘사실’(fact)을 어떻게 ‘명명’하는가에 따라, 이미 그 ‘사실’에 대한 해석과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위의 전제는 일면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만주전쟁’과 ‘만주사변’이라는 명명에는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이 존재할 뿐, 어느 것이

‘진리(진실)’이고, 어느 것이 ‘허구’인지 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주사변’을 ‘만주전쟁’이라고 부르거나, ‘지나사변’을 ‘중일전쟁’으로 부른다고 해서, 후자의 명명법이 곧바로 ‘진리’나 ‘진실’을 드러내주지 않는다. 일제말에도 ‘만주사변’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후대에 ‘만주전쟁’이라 명명하는 자들의 해석방식으로 그 ‘사실’을 인식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나사변’이라는 기호로 소통하고 있었다고 해도, 사건의 성격을 모두가 똑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제말을 ‘거대한 허위와 위선’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이런 인식은, ‘역사적 사실’이 저자에게는 이미 완결된 의미로서 견고한 ‘해석의 봉인’ 속에 가둬져 있음을 보여준다. 히틀러가 주도했던 독일의 파시즘이 어째서 역사의 ‘악(惡)’이었는데를 규명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일은 파시즘을 선형적으로 ‘악(惡)’이라고 규정하고 ‘해석의 봉인’을 찍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일이다. 파시즘은 역사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조건과 상황이 충족되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역사적 활물(活物)이다. 선형적으로 ‘악’이 되는 순간, 역사가가 할 일은, 그토록 명백한 ‘악’을 어째서 독일 국민들은 ‘선택’했고, ‘환호’했으며 마침내 그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역사의 ‘맹목’을 규명하는 일뿐이다. 그러나, 파시즘의 어떤 성격과 논리가 독일 국민들을 설득했으며, 체제의 어떤 국면과 가능성에 독일 국민들이 설득당했는가를 규명해야 그것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러려면, 그것이 선형적 ‘악’으로 미리 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똑같은 비유를, 일제말의 사상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저자가 힘주어 강조하듯이, 당시는 분명히 제국을 ‘주체’로 하는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가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이데올로기와 맞대면하는 방식은 오로지 ‘협력이나 저항이나’ 혹은 ‘투항이나 거부냐’하는 이원론적인 선택지만 주어졌던 것은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제국을 발신지로

한 담론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의 ‘출구’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었다. ‘신체제’만 하더라도, 좁게 보자면 정당과 의회의 전면적 해산과 그를 대신하는 ‘대정익찬회’의 결성이라는, 정치 체제의 혁명적 전환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신체제’는 수많은 지식인과 각종 매체와 전시기의 잡다한 동원 이데올로기가 한 데 얽혀 구성해 나가는, 실제 없는 진행형의 ‘구성체’ 같은 것이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퍼머넌트 머리’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되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생활규율로 다가왔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소애 혐오해 마지않던 서구식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의 종식을 가져 올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런 까닭에 그만큼 더 위험했고, 그런 한편으로 자의적 해석과 주관적 전유의 공간을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하는, 성글고 어슬픈 것이기도 했다. ‘근대초극론’이나 ‘동아협동체’ 혹은 ‘동아신질서’와 같은 문명론이나 동양담론으로 나아가면 사상사의 좌표와 국면은 한결 복잡해지고 미묘해진다.

그 복잡하고 미묘한 국면에서의 작가의 사상적 고투와 선택을 오로지 ‘협력/저항’의 프리즘으로만 투과해서 읽는 것, 그리고 ‘위장된 순응’과 ‘양심’의 각축도(角逐圖)로만 묘사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서평자 역시, 일제말의 작가와 지식인들이, 전시 동원 이데올로기와 총력전 체제 하에서 식민지 주체로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으리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폭력을 수반한 제도적·법적 강제로서의 파시즘이 발호하던 시기였음을 기억하고 강조해야 한다는 저자의 제안에 심분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그런 시기였다고 해서 작가가 한 시대를 살아나가는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에 대한 ‘연민’으로 사상사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연민’을 바탕으로, 힘겹게 웅얼거리면서 ‘위장된 순응’을 표현하고, 텍스트의 다른 이면에서 그것이 ‘연기’이자 ‘거짓’이었음을 고백하는 순간을 포착해, 그들이 결국

은 민족적 ‘양심’을 지키려고 애썼음을 입증하고 ‘윤리적’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문학사적 가치를 재구(再構)하는 데에도 동의하기가 망설여진다.

서평자에게는 1930년대 한국 근대문학이 미학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최초의 시기였다면, 1937~45년간에 이르는 일제말은 사상사적으로 가장 이채로운 시기로 각인되어 있다. 비록 외발적 계기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서, 한국의 근대 작가와 지식인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근대’와 ‘근대성’에 대해 처음으로 발본적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동양’과 ‘서양’에 대한 문명사적 인식의 전환도 이러한 발본적 성찰의 계기와 맞물려 있었다. ‘서양’과 ‘근대’를 처음으로 대상화하고 타자화할 수 있었던 점은, 그것이 제국을 발신지로 한 담론인가 아닌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었다. ‘국민국가’의 경계와 위상도, ‘민족’과 ‘국민’이 그러한 ‘국민국가’에 포섭/배제되는 양태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모색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작가와 지식인의 내부에서 형성된 균열은, 저자가 책을 통해 증명해 보이려고 애쓴, ‘위장된 순응’과 ‘내면의 양심’ 사이에서 형성된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근대’와 ‘근대성’에 관한 그 발본적 성찰이 지닌 의미를 어떻게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나 동원 체제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일제말 문학사상사에서는 이것이 더 의미 있는 ‘균열’이라고 볼 수 있다. ‘발본적 성찰’이라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러한 성찰이 진행되는 방식과 형태는, 작가의 지성과 지력(知力), 그리고 학문적·예술적 내공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제국을 발신지로 하는 모든 담론이 결국은 ‘거대한 허위와 위선’에 불과할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당대의 작가와 지식인의 이러한 사상적 고투를 당대의 국면에서 ‘이해’하

기보다는, ‘지금·여기’의 역사적 해석을 곧바로 당대의 현실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일제말의 문학자들이 창작을 통해 펼쳐 보인 사상적 실천을 ‘역사적 맹목’이 아닌 ‘주체적 대응’으로 읽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런 까닭에, 이미 제국발 담론을 ‘거대한 허위와 위선’이라고 선규정하고, 당대의 작가와 지식인이, 그것에 거짓 포섭되는 ‘연기’를 얼마나 그럴 듯하게 텍스트에 포장해 내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의 해석 전략에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일제말 문학을 이렇게 접근할 때의 유용성을 새롭게 깨닫게 된 소득이 따로 있기는 있었다. 그것은, 서평자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던 해방 직후의 작가와 지식인들의 사상적 변모였다. 일제말에, 비록 외발적 계기이기는 했더라도, ‘근대’와 ‘근대성’, 문명사적 전환, 그리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체제 등에 대해 그토록 사상적 고투를 벌였던 작가와 지식인들 중, 이 문제가 ‘일제가 패망한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민족이 해방된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의식임을 강조하고, 그 사상적 고투의 관성을 유지해 나간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신기했다. 그것은, 앞 문장에서 ‘사상적 변모’라고 했지만, 사실상 ‘변모’라고 부르기에든 가까운, ‘사상적 휘발(揮發)’에 가까운 것이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나중에 다케우치 요시미를 읽으면서, 이 의문의 ‘공감(共感)을 희미하게나마 발견하고 위안을 얻었다. 공교로운 일이지만, 나는 다케우치가 “‘근대의 초극’은 ‘사건’으로서 이미 종결되었지만, 사상적으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할 때의 그런 감각으로 일제말 문학사상사를 이해하는 쪽이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근대의 초극’이 낳은 비극은 그것이 전쟁과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되지 못했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 감각의 차원에서 해방 직후를 볼 때, 일제말의 그 사상적 고투가 갑자기 사라지고, 난무하는 것은 ‘역사적 맹목’에 대한 ‘반성’ 일색임을 발견하는 심정은 쓸쓸하다. 그러나,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의 해석에 의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왜냐하면, 일제말의 그 사상적 고투는 진정성이 매개된 것이 아니었고, 그저 한낱 ‘위장’이나 ‘연기’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위장’이고 ‘연기’인 한, 해방 직후에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위장’과 ‘연기’를 청산하는 일밖에, 다른 것이 있을 여지가 없다.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가 가리키는 방향과 내용에 충실하자면, 일제말의 문학을 들여다 보는 우리들은, 우선 우리의 작가들에게 ‘위장’과 ‘연기’를 강요한 식민지배의 폭압성을 열심히 비난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간난신고의 시간을 ‘위장’과 ‘연기’로나마 가까스로 버텨내고, 텍스트에 ‘위장전술’과 ‘연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행간과 행간 사이에 암초처럼 어렵게 섞어 넣는, 작가들의 그 고행을 위무하고 어루만지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그 고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비난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작가들은 양심을 끝끝내 저버리지 않았다는 ‘윤리적 구제’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협력한 것처럼 보였을 뿐’, 결코 진정으로 ‘협력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소설의 장르적 규약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전략적 소임을 훌륭하게 마무리 짓는다. 사소설로서 읽어야, 이 내밀한 ‘위장된 순응’의 고백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문학사의 사상적 ‘주체’는 문득 자취가 묘연해진다. 당시에 제기된 ‘근대’에 관한 발본적 성찰의 기회는, 무려 50년을 기다려, ‘해체’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박래품’이 도래할 때까지, 사상사의 어두운 창고에서 깊은 잠을 자야만 했다.

서평자인 내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 지닌 주관성과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성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 점에서, 일제말을 오로지 ‘협

력/저항'으로 읽어내기 위해 애쓰는 쪽과 어슷비슷한 형국이라고 자위한다. 좀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협력/저항'의 제한된 이분법적 구획에 대한 일종의 '어깃장'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식민주의의 역사적 관성, 그것이 미친 영향, 그것이 드리운 역사의 그늘은, '협력/저항'의 구획만으로 도저히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민지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협력이냐 저항이냐' '투항이냐 거부냐'하는 이분법적 질문은, 아주 적은 일부분의 진실만을 드러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는, 그러한 질문방식의 주박(呪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일제말의 문학을 보는 관점, 혹은 인식의 지평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 하느라, 개별 텍스트 해석에서 이 책이 보여준 성취를 세세히 적지 못했다. 그러한 성취의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이를테면, 서평자의 해석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한 몇 개의 글들을 통해 많은 점을 새롭게 일깨움 받았다. 예컨대, 「'자화상' 연작의 의미-박태원의 경우」 같은 논문에서, 박태원의 「채가」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환기 받았다. '합리성'을 매개로 '근대'와 '전통'의 문제를 고민했다고 본 서평자와는 달리, 저자는 그 소설에서 일본인 '와타나베'의 상징성과, '창씨개명'의 문제, 혹은 '채가'라는 제목에 함축된 '빛'의 다양한 내포를 읽어냈다. 충분히 동의할 만한 해석이다. 물론, 이러한 동의와 환기가 기존의 내 해석을 포기하거나 오류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러한 해석이, 일제말의 박태원을 읽는 유효한 코드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이한 해석은 '빙탄불상용'이 아니라 '공존 가능'한 해석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다. 여러 곳에 밑줄을 그으며 읽었지만, 그 중의 한 구절을 되새기면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어떤 연구들은 결코 다른 연구에 의해 극복되는 법이 없다”(14쪽). 그렇다. 이 서평의 후반부에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를 다소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이 노작의 빛이 바래지거나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만에 일제말 문학사상사에 관한 무게 있는 저작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고, 이를 토대로 작금의 한국 근대문학연구가 아연 활기를 띠면서 다양한 토론이 만개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오랜 시간동안 공들여 연구하고 쓰는 일을 반복했을 방민호 교수의 노고에, 같은 길을 걷는 동학으로서, 깊고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